

전남대병원 신축 '적극'... 트램 지나는 복합쇼핑몰 '난색'

국민의힘, 광주·전남도와 예산정책협의회 지역 현안·국비확보 논의

권성동 대표직무대행, 광주 현안·국비예산 당 적극 지원 약속
강기정 광주시장·김영록 전남지사·김관영 전북지사 총출동
지역별 현안 설명하고 중앙정부·국민의힘의 전폭 지원 요청

광주시가 호남 구애에 나선 국민의힘을 상대로 민선 8기 첫 이슈로 떠오른 광주복합쇼핑몰 개발 사업의 밀그립을 공개하고, 트램 등 연결망 구축 등에 9000억원 규모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간이 투자하는 게 원칙이고, 타지역과 형평성 문제도 있다. 예산 규모도 너무 커 시간이 오래 걸릴 듯 하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대신 1조 2000억원 규모의 '미래형 뉴스마트 전남대학교 병원' 신축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을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국민의힘은 18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2022년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지역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 의견 등을 교환했다.

이날 협의회는 국민의힘이 이날을 시작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순회 실시하는 권역별 예산정책협의회 중 첫 번째 자리로,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성일중 정책위의장, 김성원 예결위 간사, 양금희 원내대변인, 광주·전남·북·사·도당위원장 등 여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권역별 예산정책협의회 첫 행선지로 민주당의 심장부인 광주를 선택한 것은 최근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불모지 공약을 통해 통합 및 외연 확보에 나서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또한, 앞서 이준석 대표가 주도해온 '호남 구애'를 이 대표 개인의 어젠다가 아닌 당 차원의 중점 전략으로 흡수하겠다는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이날 협의회에는 광주와 전남·전북 광역단체장인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이 총출동해 지역별 현안들을 설명하고, 중앙정부와 국민의힘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권 대행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지역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정

부가 될 것"고 약속했다.

이에 강기정 시장은 "정권 교체 이후 시민들께서 호남 소외에 대해 걱정이 많으시다"며 "앞으로도 계속 국민의힘이 우리 호남지역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특히 지역 핵심현안으로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 유치'를 설명하고, 디지털 기반 광역통합유통센터 3000억원, 트램, 도로 연결도로망 구축 6000억원 등 9000억원 규모의 국가지원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또 인공지능2.0과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광주가 AI 대표도시로서 대한민국의 AI 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AI 집적단지 고도화를 위한 국비 증액과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등을 제안했다.

김영록 지사도 이날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과 함께 국립 의과대학 설립 등 지역 현안 및 내년도 국비 지원에 대한 여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인 시절부터 '호남이 잘되는 것이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호남 발전의 중요성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안다"며 국민의힘에 지역 현안 협조를 건넸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협의회 후 기자단과 질의응답시간을 갖고 광주시가 제안한 트램 등을 중심으로 한 복합쇼핑몰 지원 건의에 대해 사실상 난색을 표명했다.

권 대행은 "다른 현안사업은 이미 (광주에서) 먼저 다 받아보고 검토했는데, 복합쇼핑몰 트램 부분은 오늘 처음 듣는다"며 "기본적으로 쇼핑몰은 민간이 투자하고, 자치단체가 (기반시설 등) 여러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정부에선 일부 도로 지원 등은 할 수 있으나 워낙 많은 예산(9000억원)이 소모되는 것이어서 오늘은 청취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대신 전남대학교 병원 신축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권 대행은 "40년이 넘는 노후한 전남대병원 공간을 최첨단 의료인프라를 갖춘 '미래형 뉴스마트병원'으로 전환해 사·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1조20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예상되지만 최우선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국민의힘-호남권(광주·전남·전북) 예산정책협의회가 18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소득세 완화·법인세 인하 추진

세계개편 당정협의회

국민의힘과 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직장인 소득세 인하를 추진한다. 또 민간 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율을 낮추고 중소·중견기업의 상속공제요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2022년도 세계개편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성일중 정책위의장은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에 대한 소득세 부담 완

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해달라는 이야기를 당에서 요청했다"고 밝혔다.

소득세에 대해 "가능하면 소득이 좀 낮은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고, 폭도 좀 넓혀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소득의 (과세표준) 구간이 넓어져서 세율을 낮추는 것이다. 면세구간이 넓어진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선 "그간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돼온, 징벌적으로 운영돼온 세제 체계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했다.

민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하고 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동시에, 중소·중견기업 대상 상속공제요건 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기업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기업의 투자·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가계 대출금리 7% 오를 땐 190만명 원리금 못 갚는다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에 이를 경우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빼면 대출 원리금도 못 갚는 사람이 19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금리가 높은 대부업, 저축은행 등 2금융권과 자영업자의 다중 채무가 급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리 급등을 맞아 금리 상승이 가계 대출 차주의 상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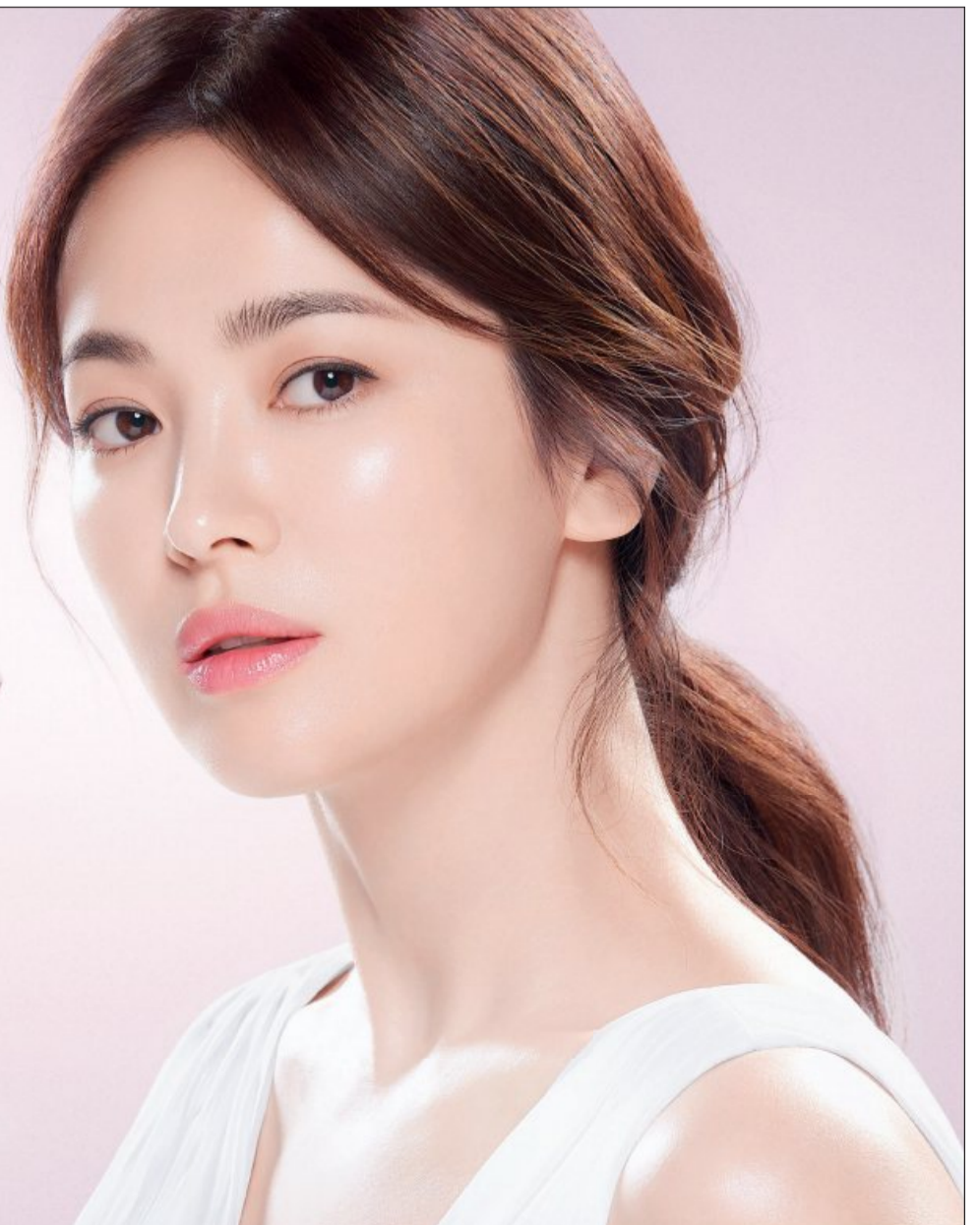
올해 3월 말 현재 전체 금융권의 가계 대출은 1616조2000억원으로, 평균 금리(3.96%)가 3% 포인트 상승하면 대출자 1646만명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를 넘는 경우가 19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기존 140만명에서 50만명이 늘어난 것이며 이들의 부채 금액은 357조5000억원에서 480조4000억원으로 122조9000억원이나 증가하게 된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바이탈뷰티

마시는 프리미엄 콜라겐 슈퍼콜라겐 골드



구매문의 :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080-023-5454